

世界經濟의 新地域主義와 多者主義

吳 勇 錫

新地域主義는 多者主義와 대립관계에 있었던 과거의 지역주의와는 다르다. 신지역주의는 다자주의와 補完的 關係를 가지고 世界經濟體制의 구축과 通商自由化에 의한 世界厚生의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현존하는 지역경제통합체가 비록 域外國에 대하여 배타적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참여국들간에는 교역장벽의 철폐를 통한 경제통합이라는 점에서 세계경제 전체로는 일종의 개방적 교역부문의 확대이며 세계경제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신지역주의의 논리를 활용하여 한국은 동북아경제협력체제의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1. 問題提起

인류가 공존을 위하여 추구하는 理想은 汎世界主義(globalism 또는 universalism)이다. 이런 관점에서 WTO체제의 多者主義(multilateralism)는 범세계주의와 합치한다. 거기에 비해서 폐쇄적이고 배타적 속성을 가진 地域主義(regionalism)는 범세계주의와 상반되고 다자주의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경제는 지역공동체 창설 붐이 일고 있다. 이미 있는 경제공동체 말고도 1998년 1월 1일에 아랍 自由貿易協定이 발효되었고, 1999년 1월 1일부터는 EU 가운데 11개 나라로 이루어진 유럽 單一通貨同盟(EMU)이 출범한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 지역경제공동체의 창설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2000년에 인도를 비롯한 일곱 나라가 南아시아 自由貿易地域(SAFTA)을 창설하고, 2003년에 ASEAN 自由貿易協定(AFTA)이 발효되며, 2005년에는 남북 아메리카주 34개 나라가 美洲自由貿易地域(FTAA)을 출범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이밖에 중앙아프리카 여섯 나라는 2000년대초에 경제통합협력체를 만들기로 하였고, 東아시아 經濟協力體(EAEC)와 東北亞經濟共同體에 대한 논의도 계속되고 있다.

전통적인 자유주의 무역의 관점에서 經濟圈域(economic bloc)은 지역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域內貿易自由化(intra-regional trade liberalization)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게 여겨져 왔다. 그것은 세계시장을 몇 개의 권역으로 분할하여 통상분쟁을 격화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효과적 관점에서도 범세계적 通商關係를 域內通商으로 전환시킴으

로써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가져오고 교역조건을 악화시켜 世界厚生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GATT 체제에서 지역주의는 제한된 조건 밑에서 일반적 무차별 원칙의 예외적 관행으로만 인정될 뿐이었다[MacBean and Snowden(1981, p. 13)]. 그 근거는 GATT 제24조로서 이 조항은 지역적 경제권역에 대하여 역외관세를 높일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¹⁾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지역주의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점은 우루과이 라운드 최종 협정문의 “GATT 1994”에 명시되어 있다(Trade Negotiation Committee(1994)). 이 조문은 관세동맹과 자유무역지역의 수가 늘어나고 그 중요성이 증가하여 세계무역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함으로써 세계무역 확대에 공헌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²⁾

이것은 WTO체제에서 비록 다자주의적 자유무역을 원칙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EU, NAFTA, APEC과 같은 지역협력체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음을 말해준다. 실제로 NAFTA와 APEC은 7년간이나 교착상태에 빠진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의 타결을 촉진하여 WTO의 출범을 가능하게 하였다. 즉, 미국의 주도로 역내 자유무역을 목표로 하는 NAFTA의 체결과 시애틀 APEC회의가 잇따르자 EU 국가들은 북아메리카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거대한 시장을 송두리째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미국의 협상조건을 받아들임으로써 UR 협상은 타결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들 지역협력체들의 광역화로 나타나는 새로운 개방적 지역주의 성향이 과거의 배타적 지역주의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자유무역주의자들은 여전히 지역주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어떤 형태의 지역주의도 자유무역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감소시킨다고 본다. 경제권역의 역내 국가들의 교역조건 개선과 후생의 증가는 역외 국가들의 희생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하여 動態的 觀點에서 보면, 현재와 같은 지역주의의 확산 추세는 역외 국가들이 교역조건을 악화하고 후생의 감소를 막기 위하여 相殺的 圏域(countervailing bloc)을 만드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된다[Goto and Hamada(1995) 또는 柳在元(1996, p. 63)]. 이러한 상쇄적 권역 형성의 지속은 결국 어느

(1) 이러한 제한이 가능했던 것은 그 당시 대표적 지역경제공동체인 EEC가 GATT 발효 이후에 출범함으로써 이른바 ‘祖父條項’(Grandfathering Clause)의 적용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2) 이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Trade Negotiation Committee(1994), “Understanding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XXIV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에 실려 있다.

나라의 후생수준도 증가시킬 수 없다는 것이 자유무역주의자들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자유무역주의와 지역주의는 共存할 수 없는 것인가? 자유무역주의 또는 다자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WTO가 수용하는 지역주의는 어떤 것인가? 이 글은 이러한 문제를 놓고 과거의 지역주의와 다른 오늘날의 新地域主義와 多者主義의 공존의 논리를 찾아보고 한국은 신지역주의의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밝히려는 데 목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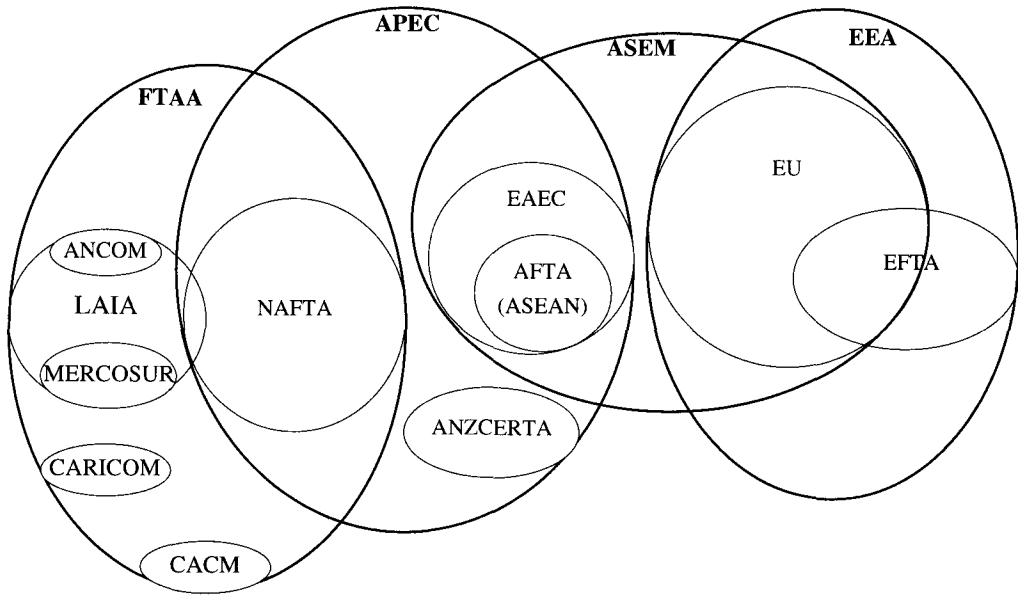
2. 新地域主義의 特徵

오늘날의 지역주의의 성향은 과거의 전통적 지역주의와 매우 다르다. 전통적 지역주의는 보호주의, 지역적 폐쇄성, 협정의 단일성, 획일적 국제분업 및 수평적 경제통합을 특징으로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신지역주의는 국제통상관계에서 자유주의와 보호주의의 折衷性(eclecticity), 지역적 開放性(openness), 크고 작은 지역협정들 사이의 重層性(multi-stratification), 신축적 국제분업, 수직적 경제통합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몇 개의 한정된 지역협력에서 발견되는 특수성이 아닌 세계지역협력의 일반적 성격으로 굳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오늘날의 지역주의를 전통적 지역주의와 구분하여 새로운 지역주의 또는 新地域主義(New Regionalism)라고 부르고 있다(孫炳海(1995, p. 37)).

신지역주의는 域內的 자유주의 통상정책의 기초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다자간 무차별적 관세인하에 동조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국가간 또는 지역간에 발생하는 통상마찰에 대응하여 신보호주의적 성향을 갖는다. 이와 같이 신지역주의는 자유주의와 보호주의 정책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이것이 신지역주의의 折衷性이다.

신지역주의는 域外 나라나 다른 지역경제무역권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등 개방적이다. 이러한 신지역주의의 開放性은 通商圈域이 廣域化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지역경제협력권이나 통상권역의 광역화는 이미 존재하고 있던 小地域協定들(sub-regional agreements)을 자연스럽게 포괄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그림 1>과 같이 넓은 통상권역 안에 좁은 경제무역권이 포함되는 重層的 構造(multi-stratum structure)를 갖게 된 것이다.

과거의 지역주의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로 대표되는 산업사회의 지역협력 형태였다. 그러나 현재의 생산과 소비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체계 안에서 세분화되고 다양화를 요구하는 정보사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신지역주의는 이러한 생산과 소비에 맞춘 신축적 국제분업체제를 형성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림 1〉 地域經濟貿易協定の 中層構造

그리고 과거의 지역주의는 경제발전 정도가 비슷한 나라들끼리 협력하는 수평적 경제권 역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신지역주의는 경제발전정도가 다양한 나라들로 이루어지는 경제 협력 또는 通商圏域이기 때문에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수직적 경제통합의 성격을 갖게 된다.

신지역주의의 특징 가운데서 지역적 개방성과 지역협정의 중층성은 지역경제무역권의 광역화와는 다른 차원에서 중요한 뜻을 갖는다. 그것은 세계의 지리적 분할구도를 초월하여 지역협정간의 상호연계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유럽의 EU와 남미의 MERCOSUR가 2005년까지 자유무역지역을 창설한다는 목표로 기본협력협정을 맺었다.⁽³⁾ 미국과 EU는 1995년 12월에 합의한 汎大西洋 實行計劃(Trans-Atlantic Action Plan)에 따라 범대서양 자유무역협정(TAFTA)을 논의하고 있다. 1996년 3월에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 국가(ASEAN, 한국, 중국 및 일본)와 EU 정상회의(Asia Europe Meeting; ASEM)에서도 지역협력이 주제가 되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세계경제의 지역간 상호의존성이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커졌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3) 1995년 12월 15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EU와 MERCOSUR 정상회의에서 체결되었다.

3. 新地域主義와 多者主義의 問題點

신지역주의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과거의 지역주의처럼 排他的이고 閉鎖的이며 局地的 情態性에 얽매어 있지 않다. 그것은 開放性과 相互依存性(interdependency)을 더욱 뚜렷이 하면서 지역적으로 광역화하는 動態性(dynamism)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범세계화를 지향하는 다자주의나 광역화로 나아가는 동태적 신지역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은 거의가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들이다. 그 문제점들은 성격상 過程上의 문제와 結果上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과정상의 문제는 개별국가의 협정참여의 경우와 소지역협정의 경우가 있다. 그리고 결과상의 문제는 경제적 효과의 측면에서 관찰된다.

3.1. 過程上의 問題

과정상의 문제는 두 가지이다. 첫 번째 문제는 다수의 개별국가들이 협정에 참여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즉, 범세계화나 광역화로 이해관계가 복잡한 나라들이 모두 협정에 참여함으로써 협정의 구속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가장 쉬운 해결책은 협정의 참여를 제한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또 다른 형태의 불평등 내지 차별주의가 등장하는 결과가 된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하여 연구되어야 할 문제이다.

두 번째는 광역협정 안에 많은 크고 작은 지역협정이 함께 존재하는 重層構造의 문제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APEC 안에 NAFTA, ASEAN(AFTA), ANZCERTA 등이 있고, EEA에 EU와 EFTA가 있다. 그리고 아메리카주 지역에 FTAA가 생기면 그 안에 NAFTA와 중남미의 여러 경제공동체가 포함될 것이다. 따라서 광역협정과 그 안의 크고 작은 지역협정들의 조화와 연계의 문제가 있다. 그러한 조화와 연계의 문제는 중소지역협정들 상호간의 조화와 협조가 먼저 원만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의 중층성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문제에 비하여 두 번째 문제는 비교적 간단하다. 그것은 중소지역협정의 존재가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OECD 연구결과에 의하면, 중소지역협정은 각국 정책결정자들과 이해당사자들에게 국제규범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다자간 질서의 형성에 구체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하나의 학습과정 또는 실험장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柳莊熙(1996, p. 3)).

실제로 UR 이전에 이루어진 중소지역협정 차원의 활발한 논의가 UR 협정의 서비스교역과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범세계적 규범을 탄생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점이 인정

되고 있다. 그러나 중소지역협정들간의 連繫(link-up) 형식을 찾아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것을 찾아낸다 하더라도 그 연계과정에서 또 다른 형태의 차별적 요소가 등장할 수 있다[柳莊熙(1996)].

3.2. 結果上の 問題

결과상의 문제는 첫째, 협정 참여자 수의 증가는 협상의 합의점 도출을 어렵게 하고 많은 비용을 들게 한다. 둘째, 참여의 혜택은 받으면서 의무를 지키지 않는 이른바 無賃乘車者(free rider) 나라의 수가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 무임승차자 문제는 다자간협정과 개방적 지역주의에서 훨씬 뚜렷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WTO의 관세양허는 회원국들이 서로 교섭하여 관세율을 가능한 한 내리도록 협상하고 그 결과를 모든 회원국들에게 무차별하게 적용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회원국은 모두 관세양허의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런 혜택을 받으면서도 관세율 인하 협정의 의무를 거절하는 나라가 있게 마련이다. 협정에 의무조항을 둔다 하더라도 범세계적 무역협정이나 APEC과 같이 처음부터 광범위하고 개방적 지역주의에서는 이러한 무임승차자 나라의 존재를 배제하기가 쉽지 않다. 비용증가와 무임승차자의 문제점이 순조롭게 해결되지 않으면 무역자유화에 의한 厚生極大化(welfare maximization)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4. 地域主義와 多者主義 共存의 理論과 實際

4.1. 理論的 接近

지역주의가 다자주의와 공존할 수 있는가 하는 이론적 문제는 일차적으로 지역주의의 域內 貿易創出效果가 域外の 貿易轉換效果보다 클 수 있느냐이다. 정태적 관점에서 립시(R.G. Lipsey)류의 次善의 理論(second-best theory)에 의하면[Lipsey(1970)], 공존의 가능성은 충분하다. 즉, 지역주의에 바탕을 둔 관세동맹의 경우에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큰 나라가 동맹 이전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다면 관세동맹으로 인하여 교역조건을 변화시켜 오게 되어 설사 무역전환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복지의 하락을 수반하지 않게 된다[金世源(1996, p. 8)].

또한 동태적 관점에서 볼 때도 논리적 긍정성이 발견된다. 그것은 지역적 경제통합이 경제적 장벽에 의하여 고립되어 있던 국가단위의 생산물과 생산요소 시장이 통합되는 廣域化市場效果(effect of enlarged market)를 발휘할 수 있다는 데 근거한다. 즉, 規模의 經濟性(economies of scale)과 外部效果(externality)가 커지고 경쟁성과 효율성의 증대가 이

루어지며 경제성장률이 제고된다는 데 증거가 모아지고 있다[金世源(1996, p. 9)]. 한때 벨러사(B. Balassa)는 독과점화를 우려하기도 하였으나[Balassa(1962, p. 165)], 최근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데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Balassa and Bauens(1988)].

그리고 GATT체제 아래서 제한적으로 인정되었던 지역주의를 다자주의와 공존하는 필수적 존재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 즉, 지역주의는 다자주의를 대신하거나 보완적으로 선택된 무역자유화의 수단이며, 국제분업과 생산조직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과정이라는 것이다[Gibb and Machalak(1994)]. 이러한 논의는 지역주의와 다자주의 공존에 대한 적극론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말과 1990년대에 지역주의와 세계후생이론은 국제경제이슈와 연계되면서 세계지역경제이론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러한 이론을 구축하는 데 크게 공헌한 학자는 벨러사(B. Balassa)와 보웬스(L. Bauens), 크루그먼(P.R. Krugman), 배그워티(J.N. Bhagwati)로서 이 가운데 크루그먼의 논의가 특히 돋보인다.

이들의 일차적 관심은 自然的 貿易圈域(natural trading bloc)에 두어졌다. 자연적 무역권역이란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가 비슷하며 국민들의 의사소통이 비교적 원활한 나라들끼리 형성된 지역적 자유경제협력권역 또는 自由通商圈域이다. 자연적 무역권역이 비교적 쉽게 형성되는 까닭은 지리적 인접성에 의해 교역시간과 운수·통신 및 보험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문화적 유사성에 의해 상호 수요를 쉽게 유발하며, 국민들의 의사소통의 원활성은 업무의 원활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먼저 벨러사와 보웬스는 지리적 인접성이 자연적 무역권역에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보았다. 그들은 유럽의 지리적 인접성이 역내 공업제품 무역을 활발하게 해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Balassa and Bauens(1988, pp. 1421-1437)].

크루그먼은 오늘날 높은 역내 무역수준을 유지해 주는 지역주의야말로 자연적 무역권역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Krugman(1993, pp. 63-64)]. 그는 권역별 총생산 비중에 대한 역내 무역의 비중의 상대적 크기 즉, (역내 무역의 비중)/(권역별 총생산 비중)을 “自然的 貿易圈域指數”(natural trading bloc index)라고 정의하였다.

이 정의에서 역내 무역의 비중이 클수록 자연적 무역권역지수는 커진다. 이것은 자연적 무역권역의 지리적 인접성, 문화적 유사성, 의사소통의 원활성 등이 역내 무역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역내로부터 역외로 무역을 전환하는 비율을 낮추는 요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면 자연적 무역권역을 비롯한 지역주의는 세계후생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크루그먼은 그의 논문들을 통해 무역권역들의 관세수준이 같다고 가정하면 세계후생은 무역권역의 수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하면, 세계의 관세율이 일정할 때 세계후생은 무역권역의 수와 함수관계를 갖는다. 무역권역의 수와 세계후생의 함수적 관계는 다음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무역권역의 수가 하나일 때 즉, 세계 전체가 완전한 하나의 자유무역시장으로 통합될 때 역외관세율과 상품의 대체탄력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고 세계후생은 극대가 된다.

둘째, 무역권역의 수가 두 개 이상으로 증가하여 권역간에 상품의 대체탄력성이 커짐에 따라 세계후생은 감소한다.

셋째, 무역권역의 수가 많아져서 어느 무역권역도 세계시장을 지배할 수 없고 역외로부터 수입이 자유롭게 되는 상태에 이르면 이것은 완전경쟁시장과 같게 되어 세계후생은 다시 극대화된다.

이 관계를 종합하면, 무역권역이 두 개 이상일 경우에 무역 권역수에 따른 세계후생은 U자 꼴의 함수관계가 된다.⁽⁴⁾ U자 꼴의 曲率(curvature)은 域外共通關稅率이 높을수록 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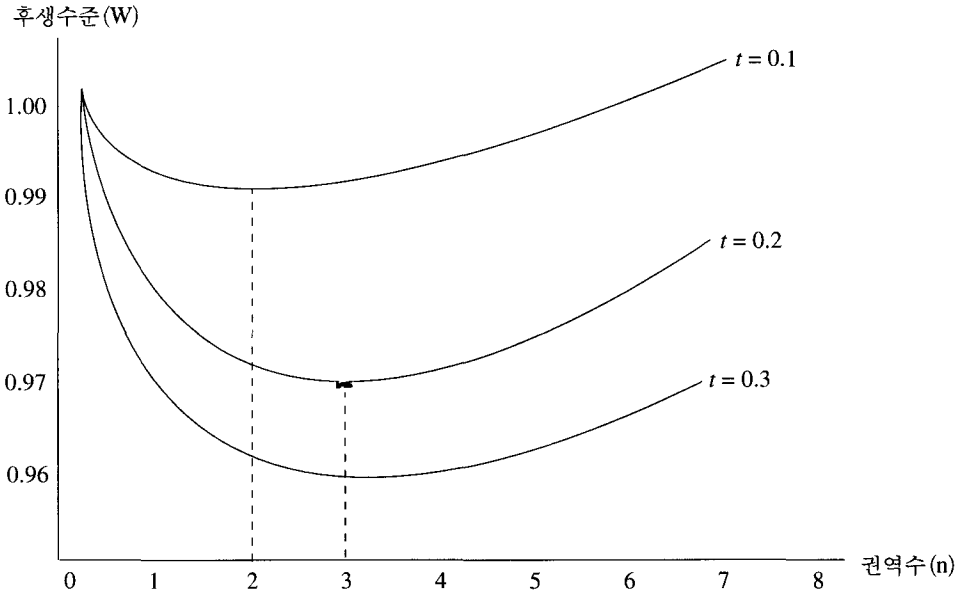
<그림 2>는 크루그먼이 예시한 U자 꼴 함수관계를 나타낸 것으로서 각 권역이 서로 다른 생산에 특화하고 상품간의 대체탄력성이 일정한 경우를 나타낸다. 그는 상품간의 대체탄력성을 4로 한 경우에 역외공통관세율이 10%이면 권역 수가 2개일 때 세계후생 수준은 가장 낮고, 역외공통관세율이 20% 이상으로 오르면 권역 수가 3개 일 때 세계후생은 가장 낮아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Krugman(1993, pp. 63-64)].

한편, 무역자유화를 위하여 강력한 다자주의체제의 감시하에서 제한적으로 지역주의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 배그워티(Bhagwati(1992))는 지역주의와 세계후생의 관계에 매우 중요한 결론을 이끌어 내었다. 그는 지역주의가 세계경제를 분할하는가 아니면

(4) 크루그먼은 각 권역이 서로 다른 생산에 특화하고 권역간 상품의 대체탄력성이 일정할 경우에 무역권역 수(n)와 세계후생(W)의 U자 꼴의 함수관계를 역외공통관세율(t)과 권역간 상품의 대체탄력성(α)을 포함하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나타내고 있다.

$$W = n[(1 + t)\alpha + (n - 1)]^{-1}[(1 - n^{-1}) + n^{-1}(1 + t)^{\alpha-1}]^{\frac{\alpha}{\alpha-1}}$$

이 식에서 t 가 일정할 때 n 의 증가에 따라 W 의 크기는 U자 꼴이 되고, n 이 일정할 때 t 가 높을수록 W 는 낮아진다[Krugman(1993, pp. 60-63)].



〈그림 2〉 貿易圈域의 數와 世界厚生의 關係

통합하는가에 따라서 세계후생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다고 보고 그 파급과정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동태적으로 분석하였다[Bhagwati(1993, pp. 31-33)]. 지역주의가 세계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로는 세 가지이다.

첫째, 지역주의가 발생할 경우에 즉각적인 세계후생은 무역장벽이 있을 때에 비해서 純貿易創出效果에 의해 증가하거나 純貿易轉換效果에 의해 감소할 수 있다.

둘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세계경제가 무역권역에 의해 분할되는 상태로 정착되는 경우에 세계후생수준은 무역장벽이 있을 때에 비해 다소 높거나 낮은 상태에 머물러버릴 수 있다.

셋째, 시간이 흐르면서 무역권역이 광역화하고 상호결합 과정을 거쳐 세계시장통합에 도달한다면 그 때의 세계후생은 자유무역이익의 극대화에 의해 최대의 수준에 이를 수 있다.

배그워티에 의하면, 이러한 다자주의에 의해 도달할 수 있는 세계후생의 증가율은 지역주의 경우보다 높을 수는 있고 안정적이지만 무임승차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역주의 무역권역의 광역화와 통합화 과정을 거치는 경우보다 낮은 수준의 세계후생에 머물 수 있다. 물론 다자주의의 무임승차자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에 세계후생 수준은 지역주의 무역권역의 광역화와 통합화 과정을 거치는 경우와 같게 된다.

4.2. 實際的 接近

이제 실제적으로 다자주의와 신지역주의가 지속적으로 共存(coexistence)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점검해보기로 하자. 최근에 발표된 논문들에 의하면, 새로이 형성된 지역협정이 시간의 흐름에 구애받지 않고 존속하기 위한 조건은 ① 투명하고 합당한 목적, ②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의 경제규모 및 인구규모, ③ 협정참가국들을 구속할 수 있는 힘, ④ 협정의 안정된 발전을 보장하는 핵심매체의 존재이다(柳莊熙 (1996, p. 2-3)).

신지역주의의 목표는 다자주의와 차이가 없을 만큼 투명성과 합목적성을 가졌다. 그 목표란 첫째,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시장의 범위를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며, 둘째, 경제적 기회균등의 폭을 넓혀 온 국민의 사회적 및 경제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경제와 인구 규모의 조건충족은 더 이상의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명백하다. EU, NAFTA 및 APEC과 같은 세계 주요 경제무역권의 광역화 움직임은 바로 그러한規模性的 확보를 위한 선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모든 지역통상권역들은 협정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 참가국에 대한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상례이다. 그리고 모든 지역협정에서 역내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발전의 핵심매체로 삼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신지역주의는 다자주의와 지속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함을 알 수 있다. 특히 廣域化하는 신지역주의의 動態性은 그것이 범세계주의로 나아가는 과도적 단계의 성격을 띄고 있다. 요컨대, 신지역주의는 다자주의나 범세계주의에 모순되는 상호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보완적 관계에 있다.

다자주의를 지향하는 WTO의 모태인 UR협정은 EU의 주장과 그 통합추진과정을 그대로 인정하였고, NAFTA와 APEC은 미국의 주도 아래 UR협정의 타결을 전제로 하여 결성되었다. 따라서 WTO는 그 탄생에서부터 지역협정과의 모순을 거의 해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한 예로서 APEC은 WTO와의 일치성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WTO 체제는 지역협정국 상호간에 시장개방의 확대의 수혜자가 되게 하고, 지역협정은 개별국가들의 의견을 통합하는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범세계주의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APEC은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일정과 같이 WTO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나 불충분하게 다룬 분야의 협력을 함으로써 WTO를 보완하고 있다.

신지역주의의 증충적 구조는 범세계적 경제통합을 쉽게 할 수 있다. 증충적 중소지역협

정들은 광역경제무역권과 세계의 다자간 무역·투자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협상의 주체로서 역할하기에 적합하다. 예컨대, EU-MERCOSUR의 자유무역협정, 미국-EU의 TAFTA 논의, 아시아-EU의 ASEM 등은 대륙간 협력체로서 지역협정을 통한 범세계적 통합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지역협정의 연계는 개별 나라가 여러 지역협정에 동시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협정간의 대립이나 갈등요인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임승차자의 존재를 막을 수도 있다.

5. 結 論

지금까지의 논점들을 종합해보면, 新地域主義는 多者主義와 대립관계에 있었던 과거의 지역주의와는 다르다. 신지역주의는 다자주의와 補完的 관계를 가지고 世界經濟體制의 구축과 通商自由化에 의한 世界厚生의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현존하는 지역경제통합체가 비록 域外國에 대하여 배타적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참여국간에는 교역장벽의 철폐를 통한 경제통합이라는 점에서 세계경제 전체로는 일종의 개방적 교역부문의 확대이며 세계경제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신지역주의가 세계경제체제에서 다자주의와 공존 가능하다는 논리가 정착함에 따라 지역경제공동체의 구축과 확산은 더욱 보편화될 것이다. 신지역주의의 廣域性과 開放性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EU나 NAFTA와 같은 중심적 경제공동체의 힘은 여전히 막강할 것이 틀림없다. 중심적 경제공동체의 구축에 성공한 지역은 域內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의 통합, 그에 따르는 노동, 자본 및 기술 등의 요소 이동 등이 활발한 반면에 그렇지 못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방적이고 중층적인 신지역주의 구도에서 중심적 경제공동체를 갖지 못한 채 APEC, EEA, FTAA와 같은 광역경제권에만 속한 나라와 중심적 지역경제협력체에 중층적으로 동시에 속한 나라를 비교해 보면, 후자가 훨씬 유리할 것은 당연하다. 지역경제공동체간에 서로 협력을 함으로써 協力作用效果(synergy effect)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분배는 교역조건이 양호한 중심적 경제공동체에 더욱 많이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개도국의 지역주의적 경제협력이 기대한 만큼 경제적 효과를 얻지 못한 것은 선진국에 대한 높은 경제의존도로 인하여 중심적 경제공동체로서 응집력을 갖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 중국 및 일본은 중심적 지역경제공동체에 속하지 못한 채 APEC이나 ASEM과 같은 광역의 중층적 협력체에만 속해 있다. 따라서 이 세 나라는 중심적 지역경

제공동체를 필요로 한다. 동북아 國際分業體制에 의한 경제공동체를 구축한다고 할 때, 그 特化構造의 主軸은 선진권-중진권-후진권의 삼각구도이다(吳勇錫(1996, p. 44)). 여기서 선진권, 중진권 및 후진권을 대표하는 나라는 일본, 한국 및 중국이다. 生産要素의 賦存과 산업 및 공업의 比較優位構造를 달리하는 선진, 중진 및 후진의 세 형태의 경제가 인접하고 있는 지역은 동북아 세 나라를 제외하고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찾아 보기가 쉽지 않다. 이것은 國際分業의 관점에서 보면, “黃金의 3角 組合”(golden triangular combination)이라 아니 할 수 없다(吳勇錫(1997, p. 49)).

한·중·일 세 나라의 국제분업체제는 자연적 무역권역의 시각에서 기술분업체제와 직결된다. 왜냐 하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국제분업체제하에서 상호 교역의 확대는 개도국에 대해 輸入代替와 輸出成長을 자극하여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直接投資와 合作生産을 유발하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국제기술분업체제로 발전하기 때문이다. 한·중·일의 동북아 국제기술분업체제가 정착될 때, 세 나라는 신지역주의 경제협력의 가장 보편적 방식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실현된다면 동북아시아의 중심적 지역경제공동체의 구축은 가능해진다.

동북아시아의 상황을 고려할 때, 경제협력의 구도는 다른 지역과 같이 정치적 안정기조 위에서 촉진시켜 나갈 수 있는 형태는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경제협력을 통해서 정치적 안정화를 유도해 나가야 하는 특수한 지역이다. 과거의 지역주의 논리에서 동북아와 같은 특수지역의 경제협력체제의 구축은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다자주의와 공존이 가능한 신지역주의 논리에서 동북아와 같은 특수 지역에서도 경제협력체제는 구축될 수 있다.

일단 동북아 경제협력체제가 구축되면, 그것은 한국의 양대 국가적 과제인 경제의 선진화와 남북통일을 이루는 데 크게 유리한 여건을 제공할 것이다. 즉, 경제적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다양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동북아 경제협력을 통한 선진국과의 협력분야 확대가 가능해지고, 수출여건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시장 다변화 및 확대 효과가 커지게 되며, 안정적 자원공급원의 확보도 기대된다. 그리고 통일접근적 측면에서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구축은 남북한에 지역적이고 다변적인 협력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획기적인 통일기반을 마련해줄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은 신지역주의의 논리를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동북아경제협력체제의 구축에 나서야 한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동북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경제발전이 중간단계에 있기 때문에 선진권과 후진권을 연결하는 架橋 역할을 담당하기에 매우 적합하다.

慶星大學校 經濟通商學部 教授
 608-736 부산시 남구 대연동 110-1
 전화: (051)620-4420
 팩시: (02)512-1081

參 考 文 獻

- 金世源(1996): “經濟統合의 理論體系와 現實,” 한국비교경제학회 편, 『比較經濟研究』, 통권 4호, 3-34.
- 對外經濟政策研究院(1994): 『WTO출범과 新交易秩序』, 정책연구 94-05.
- 柳莊熙(1996): “地域主義 擴散의 肯定的 效果,” 對外經濟政策研究院, 『지역경제』, 1월호.
- 柳在元(1996): “地域主義와 世界厚生에 대한 論評,” 한국비교경제학회 편, 『比較經濟研究』, 통권 4호, 60-66.
- 孫炳海(1996): “地域主義와 世界厚生,” 한국비교경제학회 편, 『比較經濟研究』 통권 4호, 35-59.
- 吳勇錫(1996): “東北亞 經濟協力の ‘물결’ 模型,” 한국동북아경제학회, 『東北亞經濟研究』, 7, 27-47.
- _____(1997): “韓, 中, 日技術分工體系化戰略與韓國和中國的作用,” 中國社會科學院 韓國研究中心 『當代韓國』, 第3期 總第16期, 48-51.
- Bhagwati, J.(1992): “Regionalism versus Multilateralism,” *World Economy*, 15, 5, 553-556.
- _____(1993): “Regionalism and Multilateralism: An Overview,” J. de Melo and A. Panagariya(eds.) *New Dimension in Regional Integr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lassa, B.(1962): *The Theory of Economic Integration*, London, George Allen & Unwin.
- Balassa, B., and L. Bauens(1988): “The Determinants of Intra-European Trade in Manufactured Goods,” *European Economic Review*, 32, 1421-1437.
- Gibb, R., and W. Machalak(1994): *Continental Trading Bloc: The Growth of Regionalism in the World Economy*, New York, John Wiley & Sons.
- Goto, J., and K. Hamada(1995): “EU, NAFTA and Asian Responses: A Respective from the Calculus of Participation,” NBER East Asian Seminar.

- Krugman, P.(1993): “Regionalism versus Multilateralism,” J. de Melo and A. Panagariya(eds.), *New Dimension in Regional Integr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ipsey, R.G.(1970): *The Theory of Customs Union: A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London, Weidenfeld & Nicolson.
- MacBean, A.I., and P.N. Snowden(1981): *International Institutions in Trade and Finance*, London, George Allen & Unwin.
- Trade Negotiation Committee(1994):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The Uruguay Round: Final Act Embodying the Results of the Uruguay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Marrakesh, 15 April.